"한약재 안전하다"

수은·납·카드뮴 검출안돼거나 식품에서의 허용기준치 이하

◇한약재의 오염도는 일단 식품에서와 같은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했다.

한약재 중금속기준 강화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약재의 오염도는 일단 식품에서와 같은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주목을 끌고 있다.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대학원 이병철씨의 석사학위 논문인 「보건복지부 고시 한약재 중 중금속의 함량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미세한 양으로도 인체에 유독한 수은, 납, 비소, 카드뮴 등은 시험대상 한약재에서 전혀 검출되지 않았거나 식품에서의 허용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조사 발표됐다.

특히 이병철씨는 이번 연구 논문에서 『현재 국내에는 한약재의 안전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식품의 중금속 허용량을 종합하여 적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常食하는 식품을 대상으로 하는 허용기준을 복용하는 빈도가 낮고 총섭취량이 적은 한약재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약재에 함유된 중금속의 존재형태와 흡수율을 감안한 합리적인 기준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씨의 이번 논문은, 36종의 규격화 대상 한약재의 중금속 잔류여부에 대한 조사 이외에도, 아직까지 국내에서 국산과 수입 한약재에 관한 비교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약재를 비교 분석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 도봉구 상계동에서 한의원을 경영한다는 입철우(37세)씨는 『중국에서 언제까지 싼 값에 한약재를 공급할리도 없고 국내생약 농업이 중국에 예속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따라서 『우리생약살리기는 누군가는 나서서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정숙씨(47·주부 서울 도봉구 마포구)도 『시중보다 저렴하게 국산 한약재를 구입할 수 있고 무엇보다 수입한약재로부터 우리 생약재를 지키는데야 우리소비자들이 다함께 참여해야 될 일 아니냐』며 회원가입서를 작성했다.

이들 회원에게는 국산한약재전시회, 건강강좌 등 협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참여는 물론 상설매장에서 판매하는 국산한약재에 대해 5% 할인혜택이 부여된다.

생약살리기 소비자 호응커

7월26일 현재 8백여명 회원접수

우리생약살리기가 소비자회원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는 지난달 부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우리 생약살리기를 위해 우리생약살리기 회원을 모집중이다.

회원은 국산한약재상설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모집중이며, 접수된 인원은 7월26일 현재까지 8백여명에 이른다.

95년 하계 수련회

2~3일 속리산서

한국생약협회는 오는 2~3일 1박2일 일정으로 충북 보은 소재 속리산 관광호텔에서 95년 하계수련회를 개최한다.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우리생약 살리기의 범국민운동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열리는 이번 수련회에는 각 지역 지부장, 이사, 사무소장, 공판장장 등 산하 1백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박완일 교수와 성낙술 박사(동진청 작물시험장 연구관)의 특강에 이어 각 지부별 주제발표 시간도 마련돼 있어, 국내 생약농업의 현주소와 대안책에 대해 깊이있는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날인 3일은 속리산 벌주사 주변 환경보호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지부별 주제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 안성군 이웅황 사무소장 △강원도 동해시 김정태 사무소장 △충청북도 청주 흥덕구 박광웅 공판장장 △충청남도 서산 이관구 사무소장 △전라북도 완주군 이정 공판장장 △전라남도 영암군 최원길 사무소장 △경상북도 영양군 박철규 사무소장 △경상남도 남해군 김우홍 사무소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박성철 공판장장.

인사

「免」

▲송태헌(전남 여수시 사무소장 겸 공판장장) 95년 6월22일부

▲명영덕(전남 고흥군 공판장장) 95년 6월22일부

▲홍득호(전남 무안군 사무소장 겸 공판장장) 95년 6월22일부

▲조기문(전남 여천군 사무소장 겸 공판장장) 95년 6월22일부

「任」

▲송상송(경기도 양주군 사무소장 겸 공판장장) 95년 7월1일부

▲김문태(전북 군산시 공판장장) 95년 7월3일부

내방

△정형모 부회장 △황인구 부회장 △김동균 이사 △김종근 이사 △이문섭 이사 △박종연 이사 △장지홍 이사 △이홍식 사무소장(강서구) △김정동 지부장(대전광역시) △김성배 지부장(경기도) △이인기 사무소장(포천군) △이웅황 사무소장(안성군) △조광호 사무소장(정선군) △신상섭 공판장장(단양군) △최윤경 사무소장(장흥군) △최상환 사무소장(경주시) △김우홍 사무소장(남해군)

「약용작물 유통 현황실태」 특강

본 협회 이종용 회장은 7월 12일 연천율무 시험장에서 마련한 율무 연구회 연찬회에 참석, 「약용작물 유통현황과 실태」를 주제로 특강.

중국약초 산지시찰

본 협회 전근택 사무국장과 산하 회원 15명은 중국 최대의 약령시인 동방안성의 한약재 유통현황과 약초산지 시찰을 위해 오는 8월22~8월30일까지 8박9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

사설

'기준강화'가 몰고올 파장

지난 6월 27일 보건복지부는 한약재 및 생약제제에 대한 중금속기준을 현행 1백ppm에서 20ppm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약재등의 중금속 허용기준 개정안을 마련 발표했다.

국민보건 차원에서 중금속 기준을 강화한다는데야 이의를 달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적용대상이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국산 한약재일 경우, '기준강화'가 몰고 올 생약농업에의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ppm이라는 수치가 과연, 한약재 중금속 기준치에 적정한가의 문제는 접어두고라도 일단, 농민들에게 'ppm'이라는 용어자체는 도대체 생소하고 낯설다. ppm이라는 수치개념도 그렇고 토양성분에서 부터 재배과정, 가공에 이르기 까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약재를 생산해내기 위해 지켜야 할 관리기준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할 만한 농민자체 시설은 고사하고, 각종 병해발생시 사용하도록 품목고시된 농약마저 없는것이 국내 생약농업의 현실이고 보면 이같은 법의 적용은 더욱 불합리하다. 만에 하나, 생산한 한약재에서 20ppm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됐을시는 피땀흘려 지은 농산물을 몽땅 폐기처분이라도 해야 한단 말인가.

아무런 기준도 대안도 제시해 주지 않은채 막연히 식품을 기준한 주먹구구식의 「기준강화」는 지도도 나침판도 없이 항해를 계속 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100'이니 '20'이니 하는 탁상행정의 수치놀음이 아닌 보다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그리고 보다 거시적인 안목의 정책수립이 아쉬울 뿐이다.

청정약재 생산에 따른 국산한약재의 중금속기준은 사후감독이 아닌 사전에 지도, 관리돼야할 문제임을 정부는 인식하기 바란다.

수급조절에 뚫린 구멍

최근 본 협회 사무국에 생산농민들의 민원성 전화가 자주 걸려온다. 내용인 즉, 수입 두충은 5~6백원, 수입 황기가 3천5백원선에 은밀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며 이것을 막아줘야 생산자들이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수급조절대상품목으로서 반입을 결정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렇게 많은 양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니 이는 두가지 경로로 추정이 가능하다. 하나는 밀수업자에 의해 불법으로 들어오는 밀수, 다른 하나는 식품원료 명목으로 수입해 와서 약재로 시중에 판매하는 「합법을 가장한 밀수」가 그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수급조절품목의 제정의미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한약재의 수입여부와 양을 결정하는 수급조절위원회는 국내생산량 만으로도 수급이 가능할 약재에 대해서는 수급조절품목으로 묶어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수입개방화로 부터 국내생산농민을 보호하고 약용작물의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한약재 원료로 이용되는 것은 수급조절품목에 묶어 수입을 제한하면서 식품원료로는 자유롭게 수입해올 수 있다면, 이건 아무래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다. 남북교류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북한산 한약재 8백80t을 반입키로 한 것도 뒷맛이 그리 개운치 않다. 국내 생산자보호와 무관한 남북교류도 그렇고, 반입품목중에는 실제 북한에서는 생산되지 않은 품목도 있어서, 이것들은 결국 장삿속이 빤한 일부상인들에 의해 중국에서 북한을 경유하여 수입해 들여올것이 너무도 자명하기 때문이다.

국내 생산농민보호와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일은 어떤 다른 명분에 밀려 결코 소홀히 다뤄져도 될 문제가 아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더 커지기 전에 생산자보호라는 수급조절품목제정의 본래 대로, 수급조절에 뚫린 구멍은 하루속히 복원돼야 할 것이다.